

2021년 경제 및 금융 전망

2020. 11. 5.



목 차

I. 2021년 경제전망

II.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

III.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IV. 보험·비은행 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목 차

I . 2021년 경제전망

1. 경제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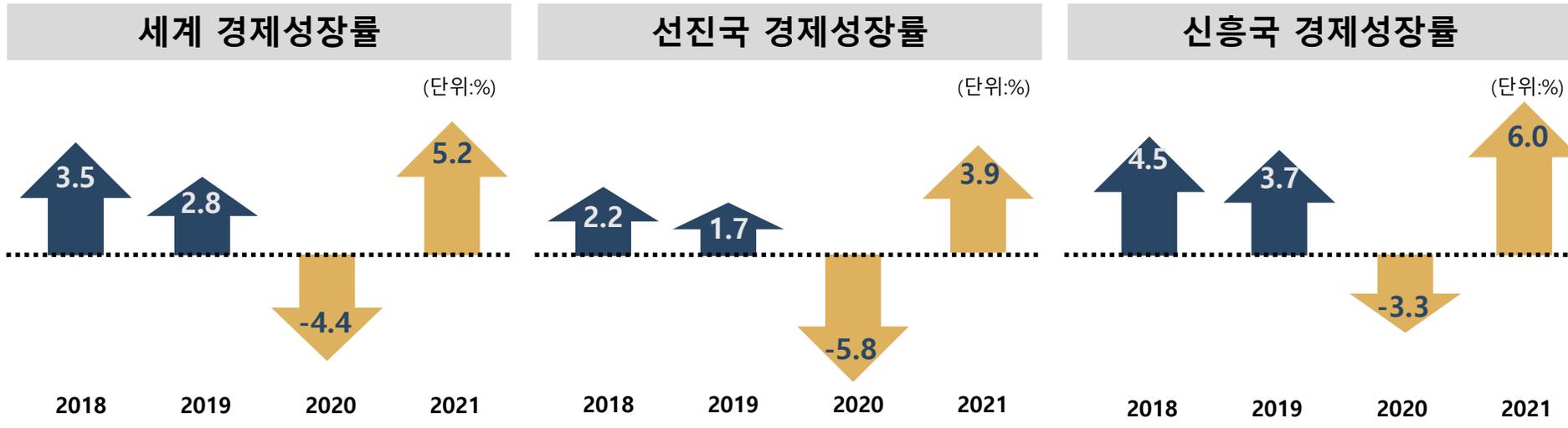
2. 위험요인 점검

3.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

가. 해외여건 (1/4)

◆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$\Delta 4.4\%$ 로 급락한 후 2021년에는 5.2% 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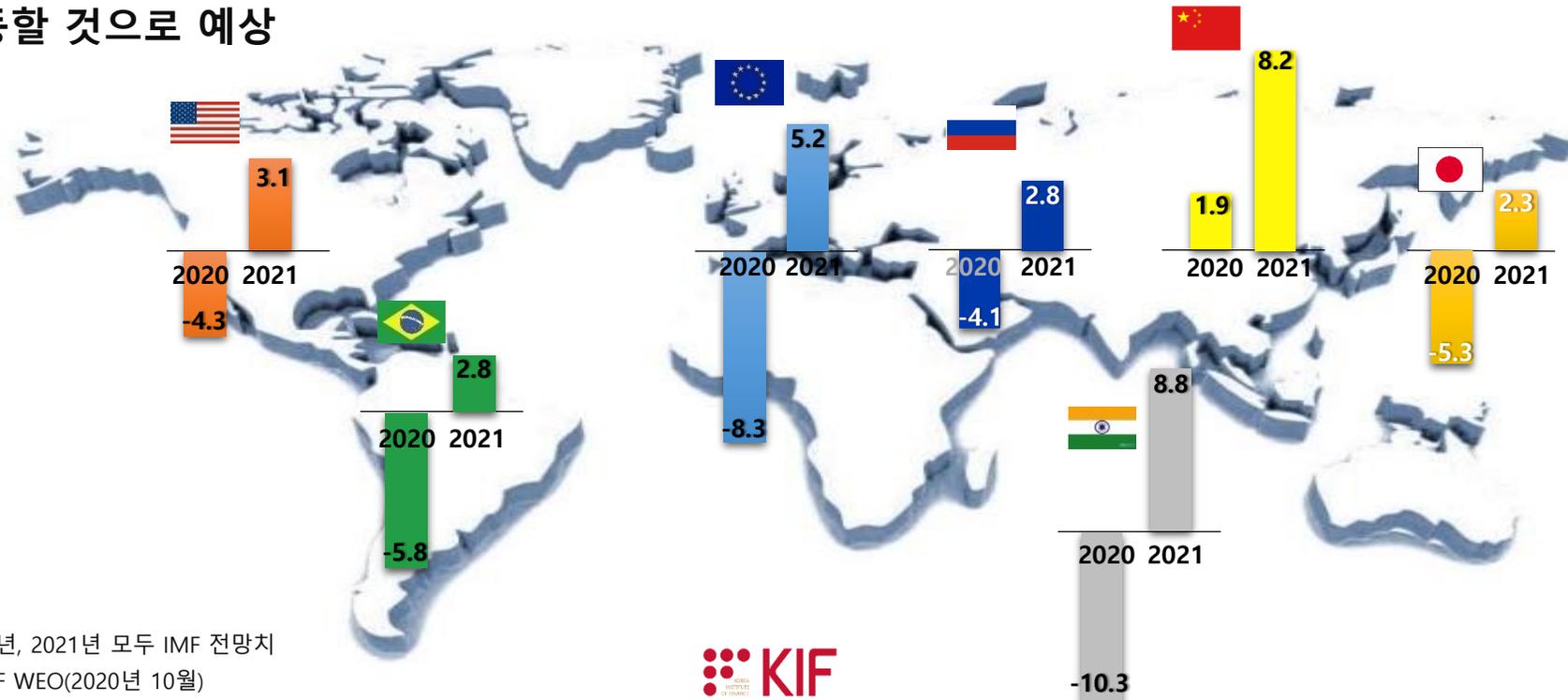
- 선진국 성장률은 2020년 $\Delta 5.8\%$ 로 위축된 후 2021년 3.9% 로 회복되고, 신흥국 성장률은 2020년 $\Delta 3.3\%$ 로 선진국 대비 완만하게 하강한 후 2021년 6.0% 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
 - ✓ 신흥국의 빠른 회복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제외 신흥국 성장률(GDP 가중평균)은 올해 $\Delta 5.6\%$, 내년 5.0% 에 그칠 전망
- 세계 교역 증가율은 관광부문을 중심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악화로 2020년 $\Delta 10.4\%$ 로 크게 위축된 후 2021년에는 8.3% 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



주: 2020년, 2021년 수치는 IMF 전망치
 자료: IMF WEO(2020년 10월)

가. 해외여건 (2/4)

- ◆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Δ 4.3%로 하락한 후 2021년 3.1%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회복 지연, 코로나19 신규 확진 급증 반복 등 불안 요인이 상존
- ◆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따른 생산활동 정상화, 전자제품·의료용품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로 2020년 1.9%의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후 2021년에는 8.2%로 비교적 빠르게 반등할 전망
- ◆ 유럽과 중남미의 성장률은 2020년 각각 Δ 8.3%, Δ 8.1%로 크게 하락한 후 2021년에는 각각 5.2%, 3.6%로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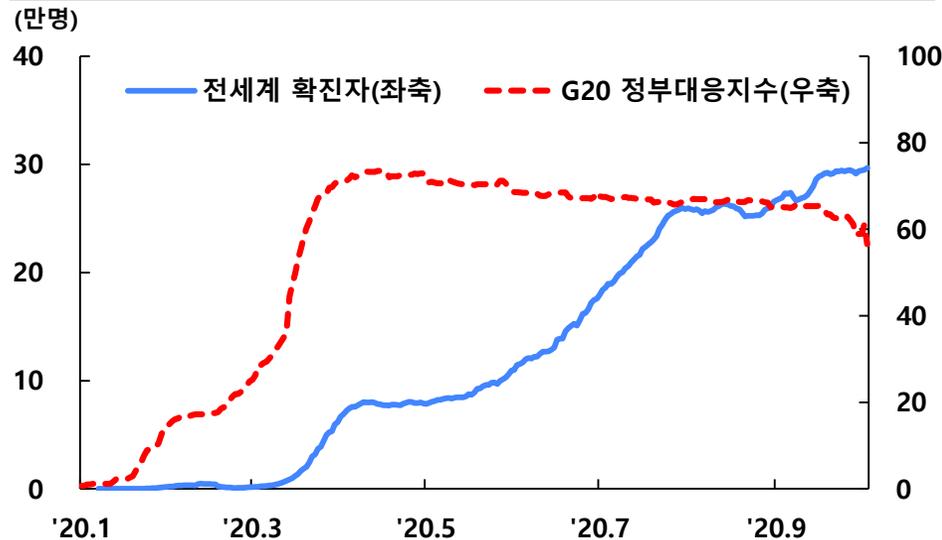
주: 2020년, 2021년 모두 IMF 전망치
 자료: IMF WEO(2020년 10월)

가. 해외여건 (3/4)

◆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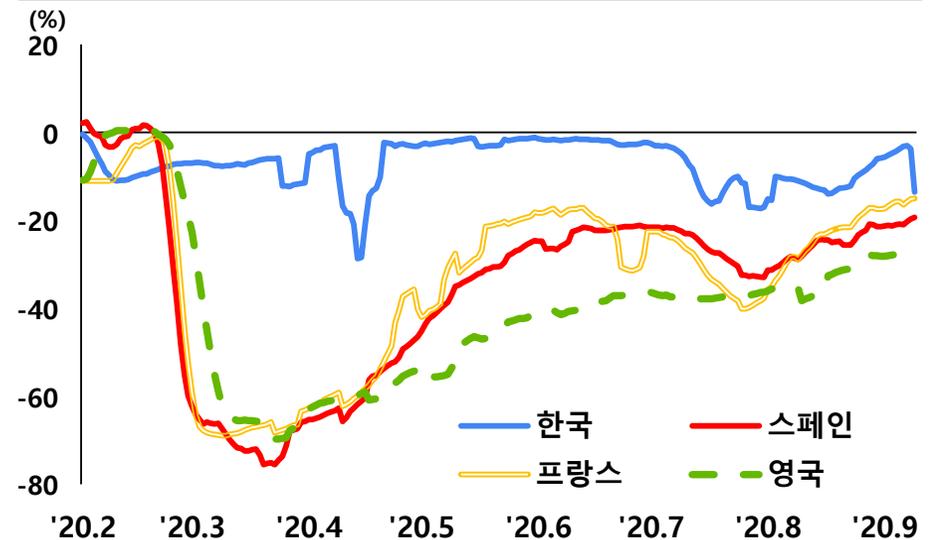
- 최근 유럽,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재차 급증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활동이 다시 위축되는 등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는 국지적 또는 세계적 재확산 가능성 상존
- 최근 G20국가의 코로나19 정부 대응 지수는 4월 고점인 73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60내외의 높은 수준 유지
- 감염병 확산세가 강해지면 정부의 봉쇄조치가 없더라도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 자제로 경기 회복이 제약을 받는 경향

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와 G20 정부대응지수



주: 1) 신규확진자 추이는 7일 이동평균
 2) 정부대응지수가 높을수록 봉쇄 수준 상향 의미, 최고치는 100
 자료: WHO, Oxford COVID-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

사무실 밀집지역 방문인구 추이



주: 기준(1.3일~2.6일 방문인구 중간값) 대비 증감률(%), 7일 이동평균
 자료: Google Mobility Reports

가. 해외여건 (4/4)

◆ 2021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47 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

- 2020년에 코로나19로 급감한 글로벌 교역량이 2021년에는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유가도 다소 반등할 것으로 예상
- 하지만 여전히 감염병 확산에 의한 수요 하방압력이 사라지지 않고, 미·중 갈등 심화, 산유국 감산이행 문제 등 여타 가격 하방요인들도 상존하여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전망
- 글로벌 달러 약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하단을 지지하는 가운데, 향후 코로나19 유행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

주요 기관 국제유가 전망

(단위: \$/배럴)

	2017	2018	2019	2020				2021
				Q1	Q2	Q3	Q4	
IMF 평균유가 ¹⁾	52.8	68.3	61.4	41.7				46.7
WTI ⁽²⁾	60.4	45.4	61.1	20.5	39.3	40.2	40.5	46.0
Brent ⁽²⁾	66.8	53.2	66.4	21.5	40.9	41.0	43.0	48.9
Dubai ⁽²⁾	63.8	52.4	65.4	23.3	40.5	39.3	40.5	45.4

주: 1) IMF 평균유가는 3개 유가 전망치의 단순평균
 2) 기말기준, 2020년 4분기 이후는 주요 투자은행 전망치의 중간값
 자료: Bloomberg, IMF WEO(2020.10)

국제유가 및 달러인덱스 추이

(단위: \$/배럴)

(단위: 1973년=100)



자료: Bloomberg

나. 경제성장률 전망

◆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내수·수출이 동반 부진함에 따라 2020년 $\Delta 1.2\%$ 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.9%를 기록할 전망

- 2020년 상반기 중 급락하였던 소비와 수출이 코로나19의 국내 1차 유행 충격이 정점을 지나고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된데다 해외수요도 회복되면서 현재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
- 2021년에는 백신 개발 및 보급의 진전과 완화적 통화·재정정책 등에 따른 국내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하겠지만,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경기회복 속도를 제한할 전망

경제성장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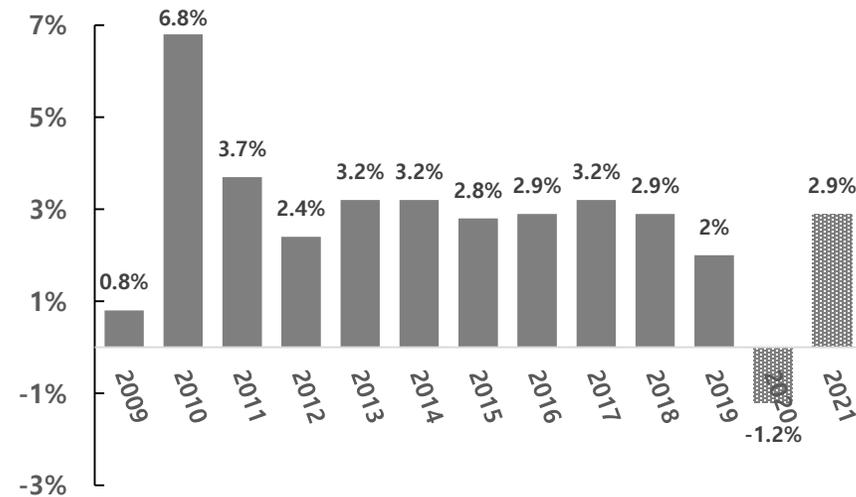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	2019	2020			2021		
	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GDP	2.0	$\Delta 0.7$	$\Delta 1.6$	$\Delta 1.2$	2.1	3.8	2.9
민간소비	1.7	$\Delta 4.4$	$\Delta 4.5$	$\Delta 4.5$	2.2	3.1	2.7
건설투자	$\Delta 2.5$	1.7	$\Delta 3.5$	$\Delta 1.0$	1.0	1.6	1.3
설비투자	$\Delta 7.5$	5.6	6.6	6.1	7.3	0.8	4.0
총수출	1.7	$\Delta 4.0$	$\Delta 3.7$	$\Delta 3.9$	7.7	4.0	5.8
총수입	$\Delta 0.6$	$\Delta 3.8$	$\Delta 5.0$	$\Delta 4.4$	3.9	4.3	4.1

주: 2020년 하반기 이후는 KIF전망치
 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경제성장률 추이

(단위: 전년대비 %)



주: 2020년 이후는 KIF전망치
 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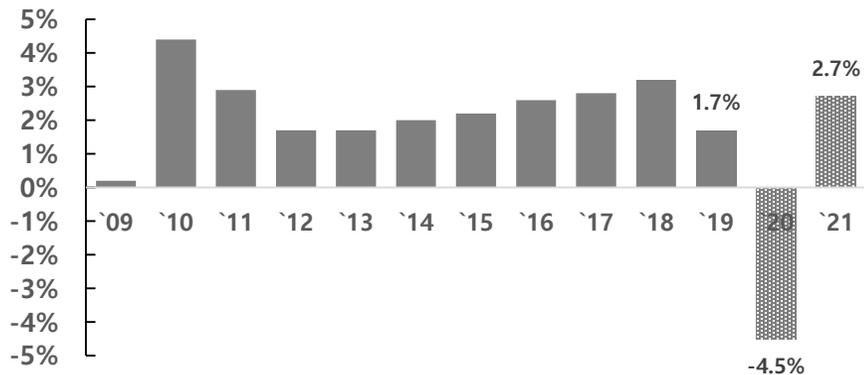
다. 민간소비(1/2)

◆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0년 $\Delta 4.5\%$, 2021년 2.7%를 기록할 전망

- 2020년 2/4 분기중 코로나19의 확산 진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1/4분기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, 해외 소비 급감,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 제약 등으로 2020년 상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$\Delta 4.4\%$ 를 기록
- 정부 재정정책이 민간소비 회복에 도움이 되었지만 감염 우려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으로 2020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 부진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민간소비의 성장 경로는 감염병 전개 양상과 소비 주체의 경제활동 수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
- 민간소비는 경제 주체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적응하여 조심스럽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2020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

민간소비 증가율

(단위:%)



주: 2020년 이후는 전망치
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민간소비 증가율 전망

(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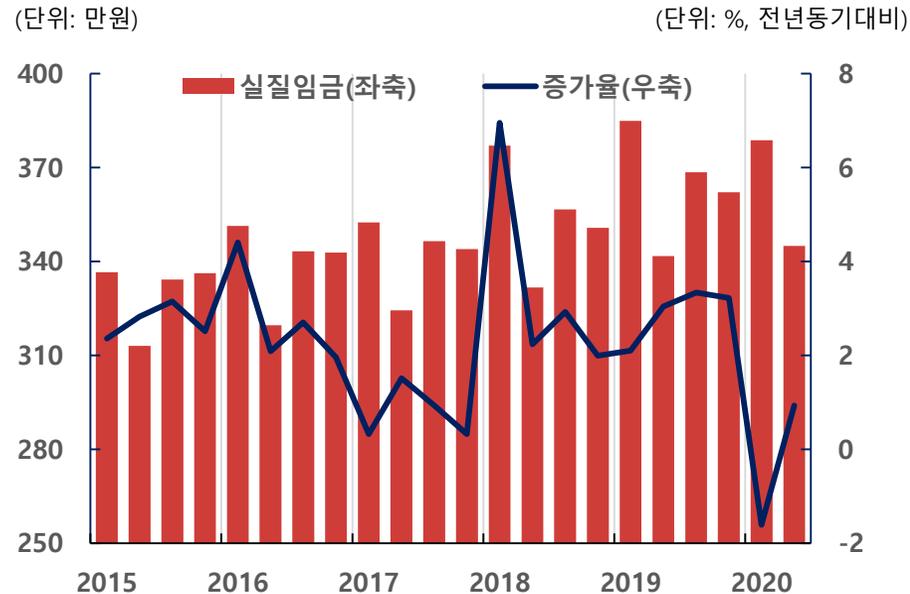
2019	2020			2021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1.7	$\Delta 4.4$	$\Delta 4.5$	$\Delta 4.5$	2.2	3.1	2.7

주: 2020년 하반기 이후는 KIF 전망치
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다. 민간소비(2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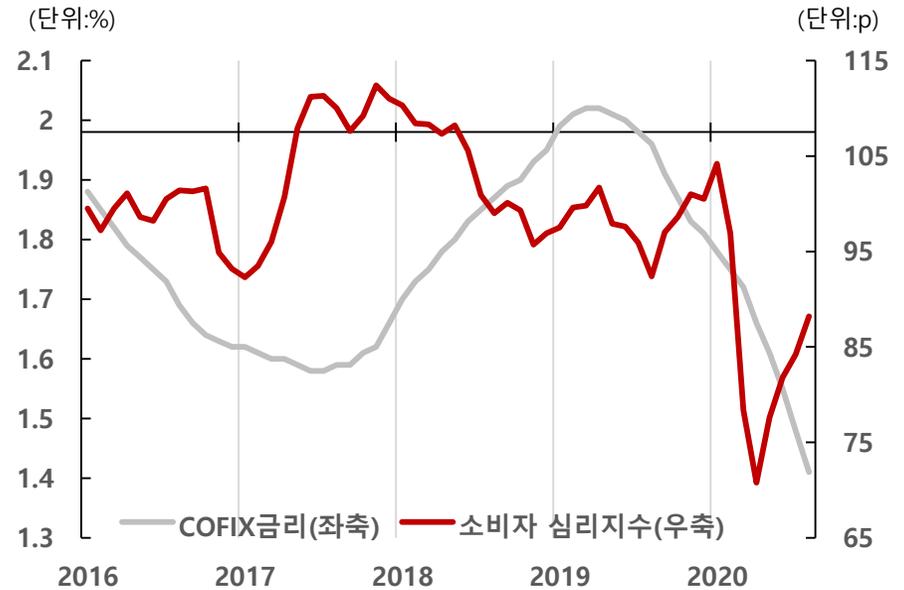
- 2020년 상반기 실질임금 증가율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부진하여 $\Delta 0.3\%$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으며 앞으로도 임금 상승률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어, 소비 여건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
- 또한, 소비자 심리지수에 나타난 민간 부문의 경기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에 비춰볼 때 최근의 저금리 정책하에서 확대된 레버리지(대출)가 실물부문 수요보다 주식,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더 미칠 가능성

실질임금 추이 및 증가율



자료 : 한국은행

COFIX금리 및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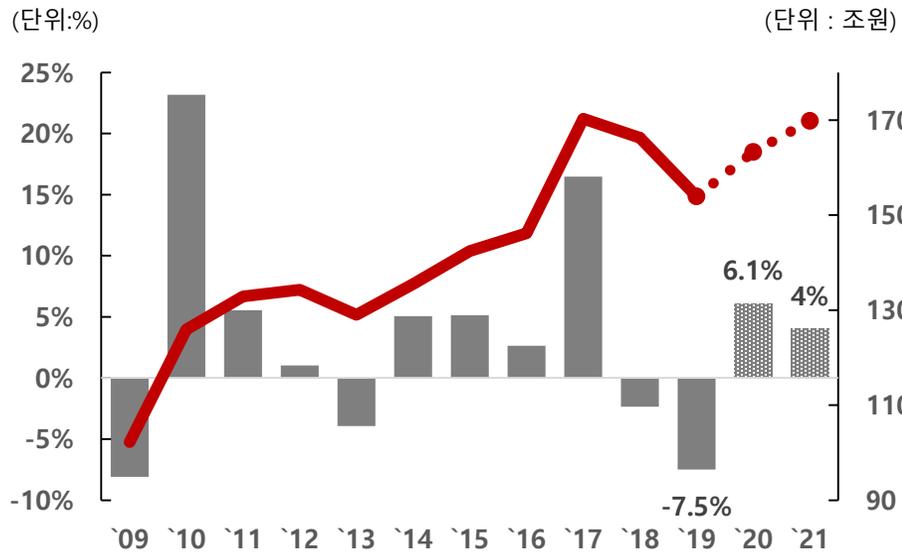
주 : COFIX 잔액기준
자료 : 은행연합회, 한국은행

라. 설비투자

◆ 설비투자는 2020년 반도체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6.1% 증가하고, 2021년에는 반도체 투자와 더불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면서 4.0% 증가할 전망

- 비대면 생활방식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글로벌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,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국내 반도체 투자 역시 증가함에 따라 IT부문의 설비투자는 2021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.
-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비IT 부문의 신규 설비투자 수요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, 2020년 지연되었던 투자가 이연되어 집행되면서 2021년 설비투자 증가에 기여할 전망

설비투자 추이 및 증가율



주: 2020년 이후는 전망치
 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설비투자 증가율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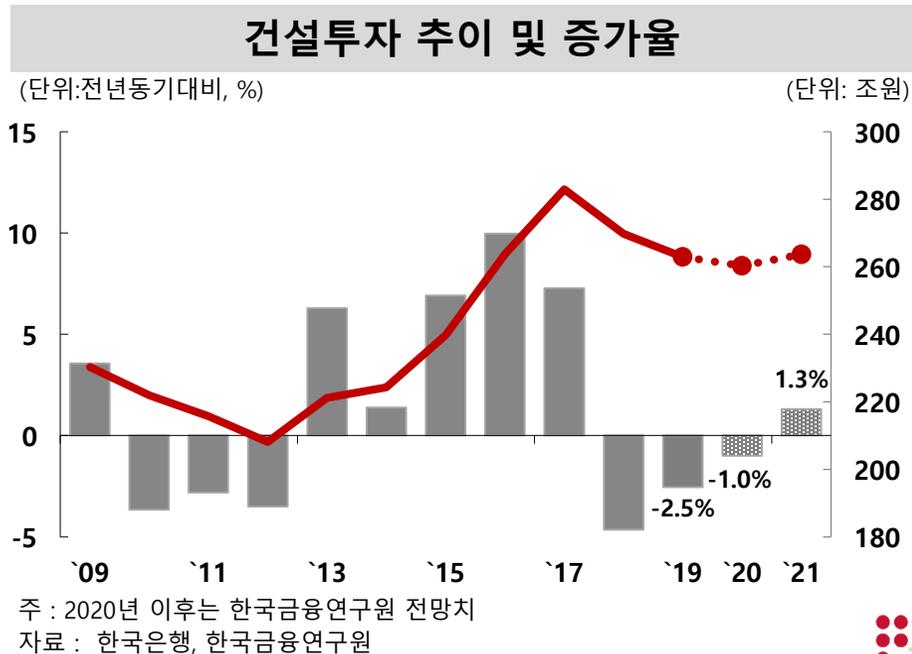
2019	2020			2021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△7.5	5.6	6.6	6.1	7.3	0.8	4.0

주: 2020년 하반기 이후는 KIF 전망치
 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마. 건설투자

◆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0년 Δ1.0%, 2021년 1.3%를 기록할 전망

- 건설기성은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, 이는 급팽창했던 2015~2016년 기간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높은 기저로 작용하며 2017~2020년 동안 누적적으로 전년동기대비 기성을 낮췄기 때문
 - ✓ 아파트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~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부분이 기성에 반영
- 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건설 기저효과의 완화와 더불어 2019년 하반기부터 증가를 보이는 건설수주 등에 따라 건설투자는 2020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202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또한, 정부의 SOC 투자가 노후 SOC 개량,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,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전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



건설투자 증가율 전망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2019	2020			2021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Δ2.5	1.7	Δ3.5	Δ1.0	1.0	1.6	1.3

주: 2020년 하반기 이후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
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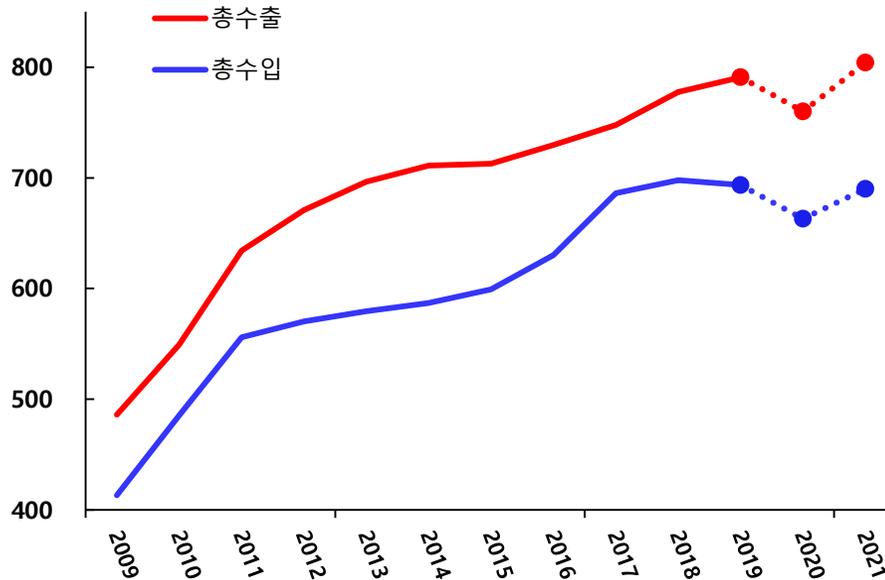
바. 수출 · 수입

◆ 총수출입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당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, 2021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총수출 및 총수입이 각각 5.8% 및 4.1% 성장할 전망

- 전 세계적 봉쇄조치의 여파와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2020년 총수출 및 총수입 성장률은 각각 $\Delta 3.9\%$ 및 $\Delta 4.4\%$ 를 기록할 전망
- 2021년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반등폭이 미흡하겠으나, 세계경기 회복 및 해외공장 생산재개에 따른 재화수출 증가와 국내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재화수입 증가가 총수출입 회복세를 견인할 전망

총수출 및 총수입 추이

(단위: 조 원)



주: 2020년 이후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
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 전망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	2019	2020			2021		
	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총수출	1.7	$\Delta 4.0$	$\Delta 3.7$	$\Delta 3.9$	7.7	4.0	5.8
총수입	$\Delta 0.6$	$\Delta 3.8$	$\Delta 5.0$	$\Delta 4.4$	3.9	4.3	4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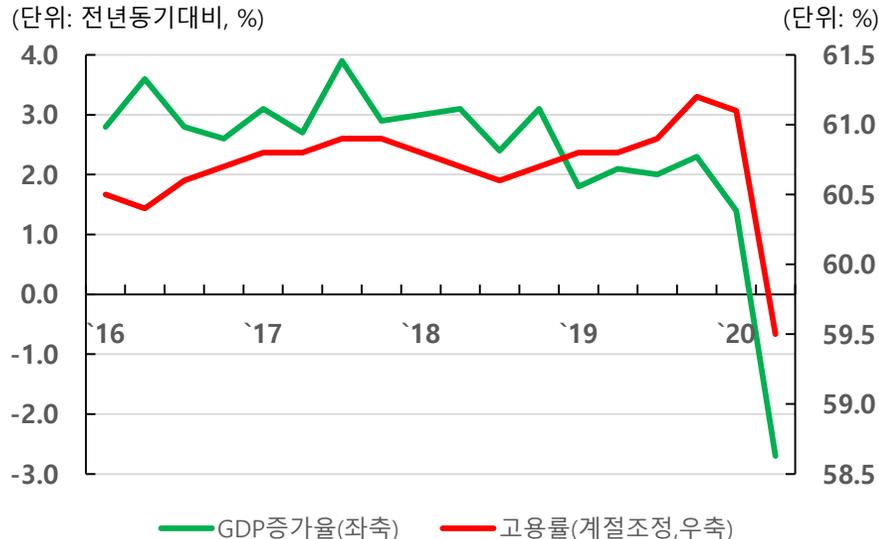
주: 1) 국민계정상 실질 총수출 및 총수입 기준 (재화 및 서비스 포함)
2) 2020년 하반기 이후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
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사. 고용

◆ 취업자수는 2020년 18만 명 감소한 후 2021년 12만 명 증가할 전망(실업률은 각각 4.2%, 3.9%를 기록할 전망)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업무 위주로 서비스업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제조업 등의 업황도 부진한 점이 2020년 중 취업자 수 감소의 배경
 - ✓ 최근 자영업 및 소상공인 휴·폐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,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지속해서 높아지는 만큼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더라도 관련 분야의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
- 2021년 경제 회복에 따라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, 2019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
고용과 경기

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고용 전망

(단위: 만 명, %)

	2019	2020			2021		
	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취업자수 증감 ¹⁾	30	Δ6	Δ30	Δ18	6	18	12
실업률 ²⁾	3.8	4.3	4.1	4.2	4.0	3.8	3.9

주: 1) 전년동기대비 증감
 2) 원계열 기준
 3) 2020년 하반기 이후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
 자료: 통계청, 한국금융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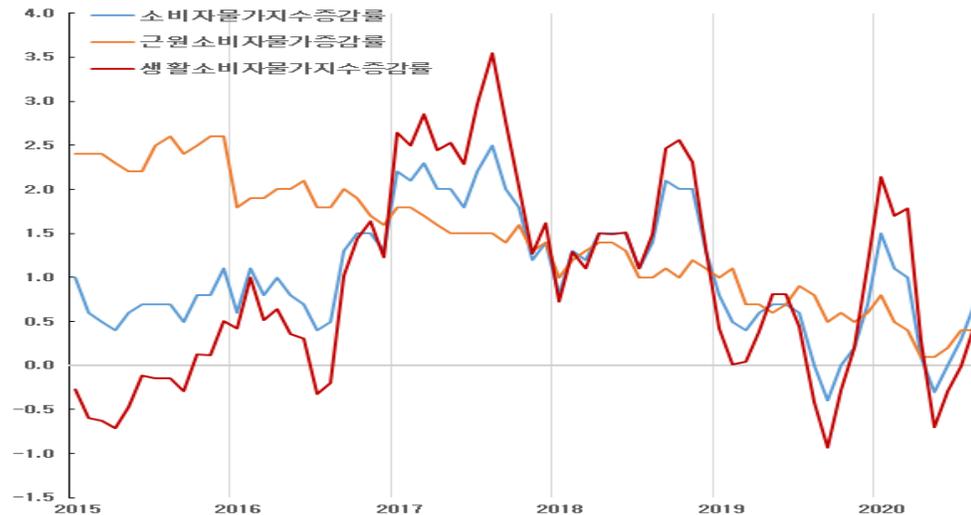
아. 소비자물가

◆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.8%로 2020년 0.5%보다 다소 높을 전망

- 2021년도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
- 확장적 거시경제정책, 부동산 및 주식가격 상승 등이 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으나 코로나19 종식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 및 글로벌 원유수요 회복 지연, 경제심리 위축, 복지정책 강화 등 정부 정책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소비자물가 상승률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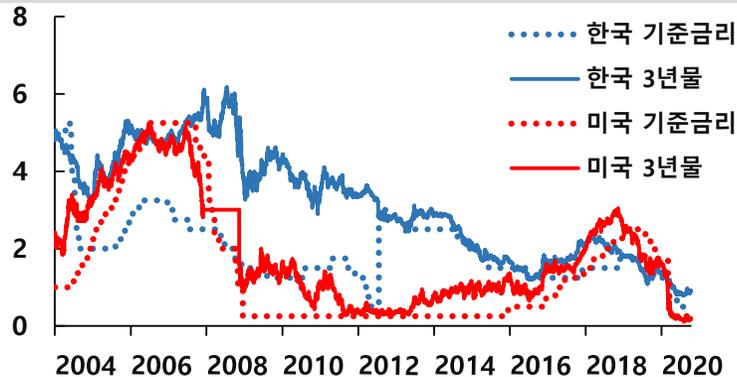
2019	2020			2021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1.5	0.6	0.4	0.5	0.6	1.0	0.8

주: 2020년 하반기 이후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
 자료: 통계청, 한국금융연구원

◆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2020년 1.0%, 2021년 1.1%로 전망

- 2021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금리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, 대내외적으로 대체로 저성장, 저물가,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하지만 국고채 발행물량 급증으로 인한 수급압력은 앞으로 주시해야 하는 금리 상방요인
 - ✓ 국고채 총 발행량은 2019년 101.7조원에서 2020년 174.5조원, 2021년 172.9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
 - ✓ 발행량 증가에 의한 기간 프리미엄 확대는 장기물 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더 크지만 3년물 금리에도 주요 상방압력으로 작용
-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 규모, 시기, 구성항목 등이 주요 변수이며, 국고채시장 수급 여건 변화에 따른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 - ✓ 9월초 한국은행은 2020년말까지 총 5조원 규모의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계획을 밝힘으로써 금리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, 2021년 매입계획이나 보다 적극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실시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

한·미 국채 3년물 및 기준금리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국고채 3년물 평균 금리 전망

(단위:%)

2019	2020			2021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1.5	1.1	0.9	1.0	1.0	1.1	1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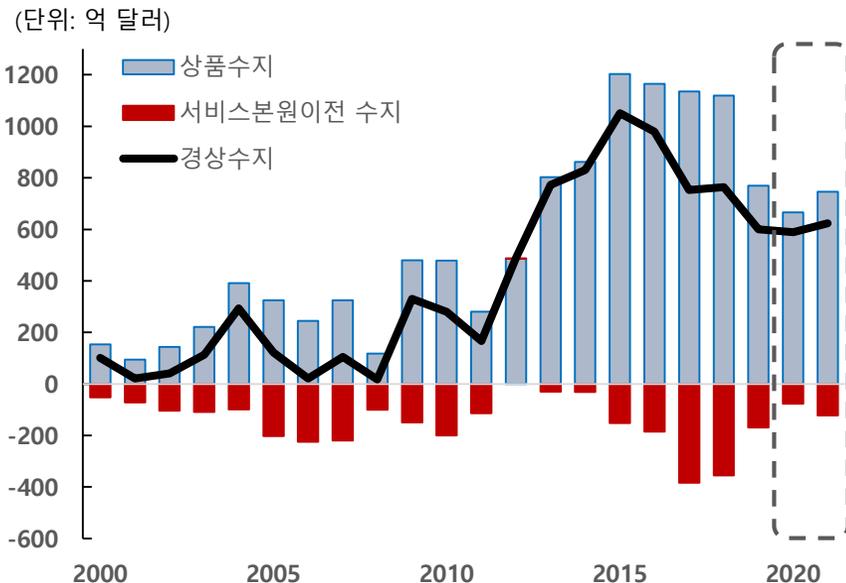
주: 2020년 하반기 이후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
 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차. 경상수지

◆ 경상수지는 2020년 589억 달러, 2021년 623억 달러의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

- 우리나라 상품수지 흑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전 세계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0년 666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후 2021년에는 세계교역 회복과 함께 746억 달러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
- 다만, 여행·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 변동이 상품수지 흑자 변동을 일부 상쇄함에 따라 경상수지 변동폭은 상품수지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.

경상수지 추이



주: 2020년 이후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
 자료: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경상수지 전망

(단위: 억 달러)

	2019	2020		2021			
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경상수지	600	192	397	589	280	343	623
상품수지	769	240	426	666	356	390	746
통관수출 (증가율)	5,422 (△10.4%)	2,406 (△11.3%)	2,628 (△3.1%)	5,034 (△7.2%)	2,732 (13.6%)	2,843 (8.2%)	5,575 (10.7%)
통관수입 (증가율)	5,033 (△6.0%)	2,295 (△9.1%)	2,370 (△5.5%)	4,665 (△7.3%)	2,555 (11.3%)	2,601 (9.8%)	5,157 (10.5%)
서비스본원 이전수지	-169	-48	-29	-77	-76	-47	-12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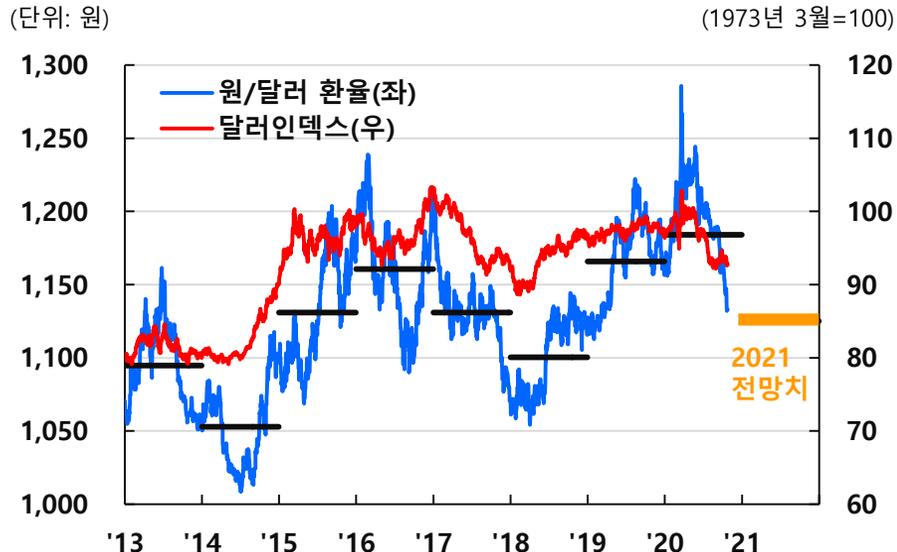
주: 1) 2020년 하반기 이후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
 2)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
 자료: 한국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금융연구원

카. 환율

◆ 2021년 원/달러 평균 환율은 2020년보다 낮은 1,125원 수준을 예상

- 2020년은 감염병 확산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연평균 원/달러 환율이 1,184원까지 상승할 전망
- 2021년 원/달러 연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
- 다만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반복, 미·중 갈등 격화 등의 불안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환율하락 폭을 제한할 가능성

원/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



주: 검정색과 주황색 실선은 각 년도 평균 환율 수준(2020년과 2021년은 전망치)
자료: 한국은행, Bloomberg

원/달러 환율 전망

(단위: 원)

2019	2020			2021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1,165	1,206	1,163	1,184	1,132	1,118	1,125

주: 1) 기간 중 평균
2) 2020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
자료: Bloomberg

<참고 1> 2021년 예산안

- ◆ 2021년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을 완화하는 한편, 전략적 자원배분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
 - 2021년 총지출*은 555.8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.5% 증가할 예정
 - ✓ 2021년 예산안에서는 고용·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이 181조원에서 200조원으로 10.7% 증가하는 한편, 디지털뉴딜·그린뉴딜·안전망강화에 21.3조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
 -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함으로써 2024년까지의 국가채무비율을 50% 후반 이내로 관리할 계획

중기 재정지출 계획

(단위: 조원, %)

	20년 ¹⁾	21년	22년	23년	24년	연평균 증가율
총지출	554.7	555.8	589.1	615.7	640.3	5.7
(증가율)	(18.1)	(8.5)	(6.0)	(4.5)	(4.0)	

주 : 1) 4차 추경 기준
 자료 : 기재부 「2020~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」 보도자료 (2020. 9)

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

(단위: 조원, %)

	20년 ¹⁾	21년	22년	23년	24년
관리재정수지	△118.6	△109.7	△123.2	△128.2	△127.5
(GDP대비, %)	(△6.1)	(△5.4)	(△5.9)	(△5.9)	(△5.6)
국가채무	846.9	945.0	1,070.3	1,196.3	1,327.0
(GDP대비, %)	(43.9)	(46.7)	(50.9)	(54.6)	(58.3)

주 : 1) 4차 추경 기준
 자료 : 기재부 「2020~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」 보도자료 (2020. 9)

<참고 2> 대안 시나리오하의 경제성장률 전망치

- ◆ 기준 시나리오하의 전망치는 올 겨울에 코로나19 확산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통제되고 2020년말 무렵 주요 선진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21년 하반기에는 미국,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백신 보급이 확산되는 경우를 전제하였음.
 - 백신이 승인되더라도 광범위한 보급 이전까지는 감염우려로 빠른 경기개선이 제약을 받을 전망
- ◆ 기본 시나리오와는 달리 선진국에서 백신이 승인된 직후인 2021년 상반기부터 불확실성 완화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빨라지는 것을 전제로 한 긍정적 시나리오하에서는 2021년 경제성장률이 3.5%까지 반등할 수 있음.
 - 장기간 지속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누적된 억압수요(pent-up)의 표출, 예비적 동기 저축유인의 약화, 지연된 설비투자의 재개 등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 -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컸던 업종의 업황전망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실업 및 폐업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수요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◆ 한편,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 지연 정도에 따라 2021년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음.

목 차

I . 2021년 경제전망

1. 경제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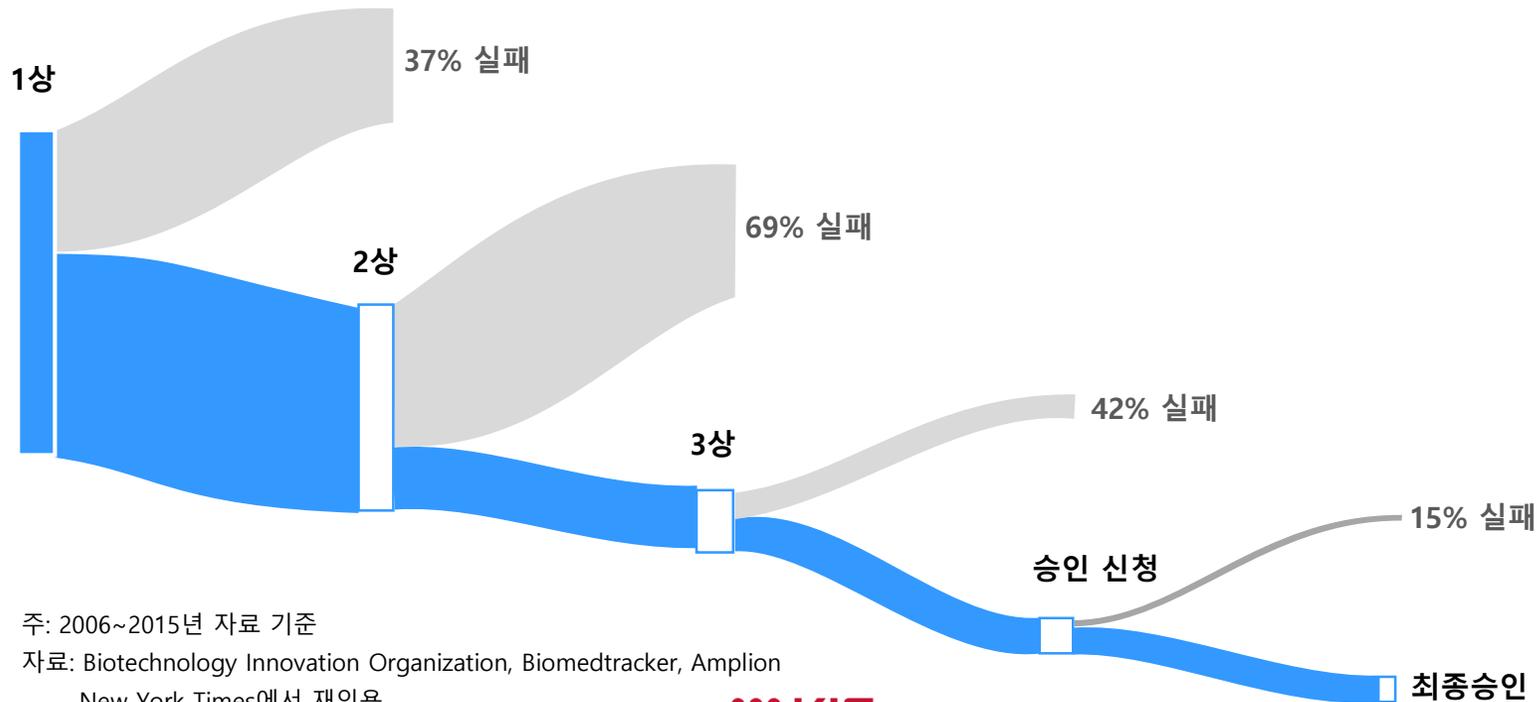
2. 위험요인 점검

3.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

가.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불확실성 (1/2)

- ◆ 백신 개발은 일반적으로 성공확률도 낮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,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개발과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.
 - 통상적으로 1상 임상시험이 진행된 백신 중에서 최종승인을 받는 비율은 10% 수준에 불과함.
 - 일반적인 백신 개발의 경우 기초연구부터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승인과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.

백신 임상시험 각 단계별 성공 및 실패 확률



주: 2006~2015년 자료 기준
 자료: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, Biomedtracker, Amplion
 New York Times에서 재인용

가.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불확실성 (2/2)

- ◆ **코로나19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다양한 과학적·경제적 요소들이 활용된 결과 현재 11개 백신 후보군의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으나, 향후 최종 승인 및 보급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 지연에 따른 하방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.**
- ◆ **백신 개발 기간 단축 요소**
 - 코로나19의 특성: 메르스 백신 개발 과정에서 이미 축적되어 있던 지식을 활용
 - 새로운 접근방식 도입: 기존의 바이러스 비활성화 방식 대신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기반으로 백신을 개발
 - 과감한 투자: 세계적 대유행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었고, 대량생산 관련 투자도 미리 진행
 - 규제 완화: 에볼라 사태의 교훈으로 FDA가 승인에 적극적이며, 임상시험 3단계도 엄격한 구분 없이 통합 진행
- ◆ **최종 승인 및 보급 관련 불확실성**
 - 러시아·중국·미국의 성급한 백신 승인 및 부작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, 부작용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3상 임상시험을 일시중단(현재는 미국만 중단)한 바 있고, 존슨앤존슨도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하였음.
 -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유통·보관 과정에 각각 영하 70도 및 영하 20도 수준의 초저온 조건이 요구되어 전 세계 보급에 기술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.

나. 미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채택 (1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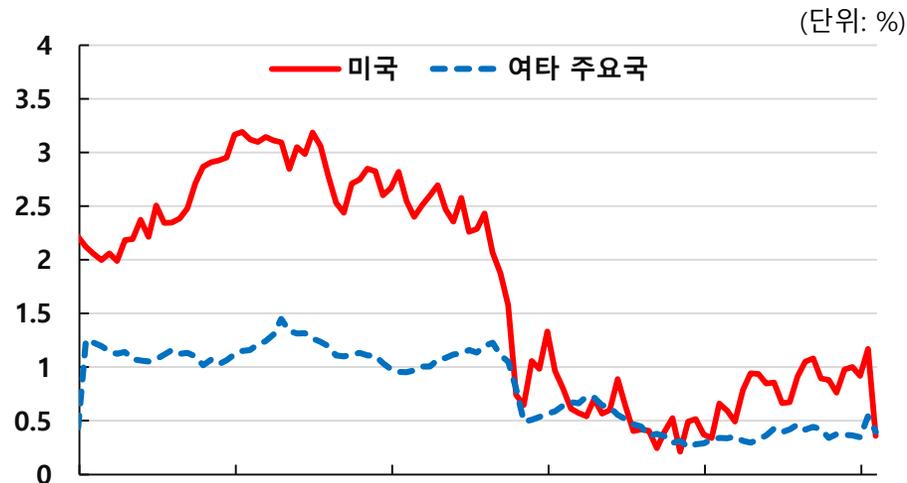
◆ 미 연준은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화정책 체계 개편을 단행

- 연준은 2019년부터 진행해온 통화정책 체계 리뷰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0년 8월 새로운 통화정책 체계의 방향을 제시
 - ✓ 향후 5년마다 통화정책 체계를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
- 물가상승률이 2%를 하회한 후에는 일정 기간 2%를 상회하는 것을 용인하는 평균물가목표제로 전환
- 완전고용 정책목표의 문구도 수정하여 실업률이 낮아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◆ 장기간의 저물가와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고려하여 이전보다 통화완화의 여력을 확보하려는 취지

- 경기대응을 위해 금리인하 여력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데, 저물가와 낮은 실질중립금리로 인해 한계가 있음.
- 이에 기대인플레이션 제고를 통해 실질금리 하락효과 및 물가상승에 의한 전반적인 명목금리 상승을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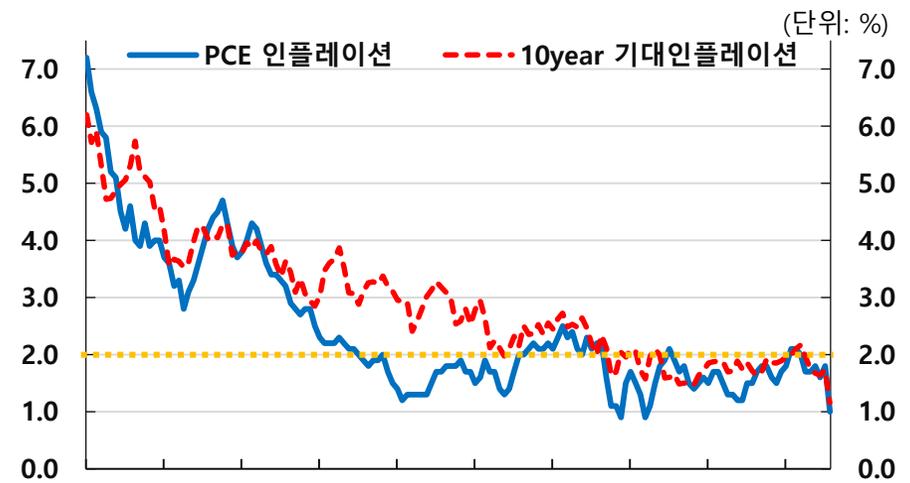
주요국 실질중립금리 추이



주 : 파란색 파선은 캐나다, 유로존, 영국 실질중립금리의 가중평균
 자료 :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



미국 인플레이션 및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



주 : 빨간색은 Cleveland Fed 추정 향후 10년간의 기대 연평균 인플레이션
 자료 :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

나. 미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채택 (2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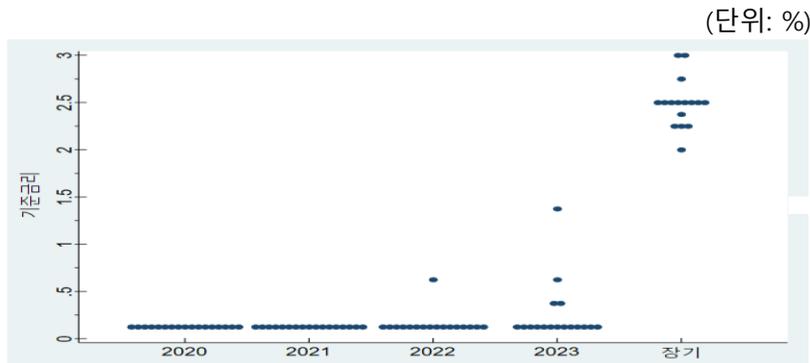
◆ 중기적 시계에서 향후 상당 기간 저금리 및 완화적 통화정책 환경이 지속될 것을 시사

- 연준은 당분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성장 및 고용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전망
 - ✓ 이론적으로는 물가상승률 오버슈팅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2% 하회를 목표로 정책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,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저성장, 저물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연준이나 학계의 기본적인 인식
 - ✓ 따라서, 평균물가목표제는 저금리 정책을 지지하는 통화정책 체계이며, 연준의 점도표도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지속할 것을 시사

◆ 자산시장 유형별 영향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실제 변화 추이에도 주목할 필요

- 주식시장의 경우 유동성 증가 가능성, 국채시장의 경우 장기채 보유 유인 저하에 의한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, 외환시장의 경우 달러 약세 가능성과 각각의 잠재적 영향에 유의
- 앞으로 기대인플레이션 및 실제 인플레이션이 정책 의도대로 움직이는지 관찰할 필요
 - ✓ 인플레이션 상승이 미진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수단(수익률곡선 통제 등)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강해질 수 있음.
 - ✓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의 급등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

9월 점도표 기준 향후 금리변화 경로



자료 : Federal Reserve Board

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(10y-3m) 추이



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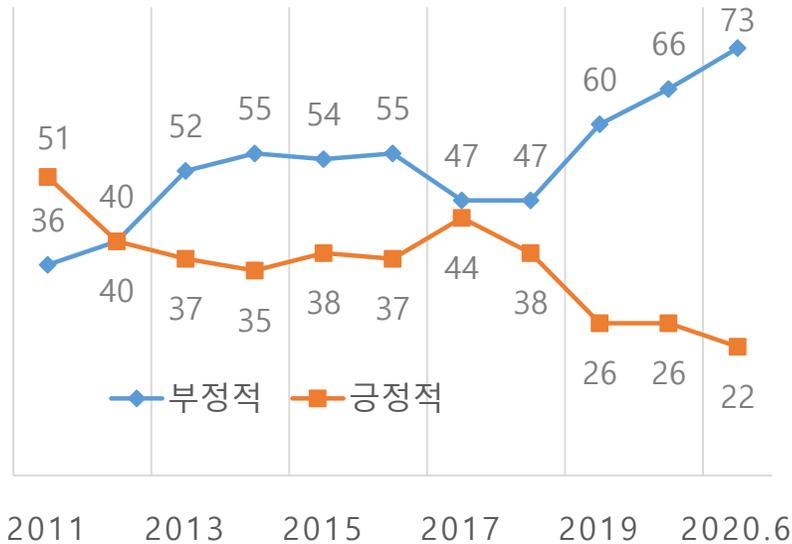
주 : 회색 음영은 코로나19 위기 기간을 나타냄.
 자료 : Federal Reserve Bank of St. Louis

다. 미중 갈등의 영향(1/2)

◆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의 의사결정 리스크가 커질 전망

-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및 체제 대결 돌입을 명확히 하고 있고, 이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강력한 중국견제가 지속될 것임.
-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관세부과 등 무역분쟁보다는 정치·안보적 사유의 개별기업 제재가 증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파트너 리스크 및 2차 제재 연루 리스크가 증가

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



주: 2020년 3월 및 6월
자료: PEW Research Center

개별기업 제재(entity list지정) 현황

연도	시행일	기업수	특징
2018	10.30.	1	반도체(JHICC)
2019	5.15	68	화웨이 및 관련사 반도체, IT 원자력 반도체 인권(위구르, 내몽고)
	6.24.	6	
	8.14.	4	
	8.19.	3	
2020	10.9.	28	이란 관련 인권(위구르) 군사 인권(위구르) 화웨이 해외 자회사 등 남사군도
	3.16.	2	
	6.5.	9	
	6.5.	20	
	7.22.	11	
8.17.	38		
8.21.	24		

자료: Federal Register 각호,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

다. 미중 갈등의 영향(2/2)

- ◆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(GVC)의 전반적 약화현상과 함께, 미중 갈등으로 인한 GVC의 디커플링과 중국의 고립화(國內大循環)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
- ◆ 산업의 성격에 따라 GVC 약화 및 디커플링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
 - 우리 기업은 노동집약적 조립제조업, 자본집약적 장치산업, 신기술·신산업 등에서 각각 다른 기회와 위험 요인에 직면할 전망

산업 성격별 GVC 변화 및 디커플링 양상

산업성격	디커플링 요인	예상 효과	우리 기업의 기회와 위험
노동집약적 조립제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 이후 각국의 리쇼어링 경향 -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로 인한 탈중국 - WTO 약화와 보호주의 경향 대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역성장 둔화 지속 (뉴노멀 지속) - 신흥국向 GVC 추가 확산 둔화 - 일대일로 등 중국의 해외팽창 둔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환경 지속 악화 - 미국의 수입전환 효과(중국→ 제3국) - 신규 생산거점 확보 기회
자본집약적 장치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산업고도화에 대한 경계심 확산 - 핵심 기술/장비 이전 규제(미, EAR) -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움직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산업고도화 지연 - 중국에 대한 FDI 둔화 - 중국의 수입대체 노력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(수입대체) - 중국정부의 생산기지 이전 압력 - 주력산업 중국 추격 둔화(반도체 등)
신기술 신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생태계 형성 저지 - 중국은 원천기술 및 초기시장 면에서 독자 생태계 구축 능력 보유 - 블록화에 대한 미중 기업의 이해 일치 (미 : 기술보호, 중 : 국내시장 장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기술 신산업 플랫폼 블록화 촉진 - 중국은 관련 인프라 및 초기시장 신속육성 ("신형인프라건설") - 미중 블록간 장기적 경쟁구도 형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투자/제휴 리스크 증대 - 독자개발 기술은 시장가치 증가 - 업종 단위에서는 양시장 이용 가능

라. 코로나19 확산과 소득분위별 소비 추이의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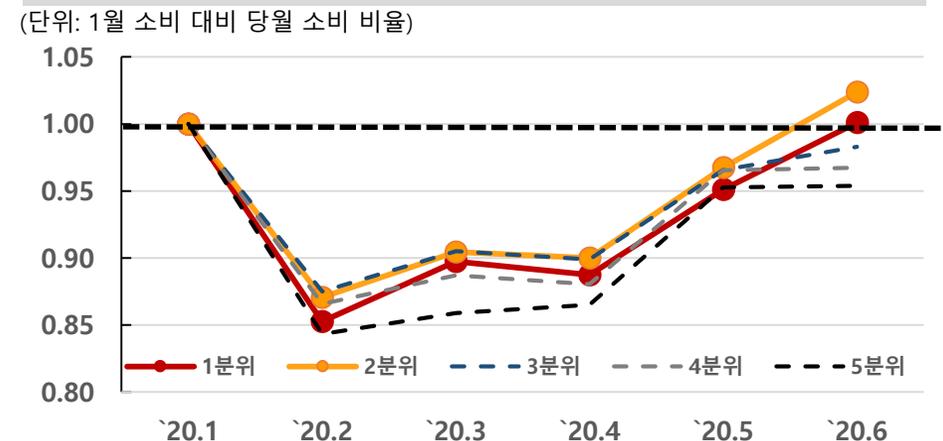
- ◆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명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, 최근 4월~6월 동안 소비의 회복시기에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.
 - 최근 1월~7월까지의 개인카드 총 승인실적은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단계 상황이 민간소비에 명확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, 반대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경우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도 가능성을 시사
 - ✓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2월, 3월 개인 카드승인은 1월 대비 각각 -13%, -11%으로 나타나는 반면,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한 4월, 5월의 개인 카드승인이 1월 대비 각각 -8%, 6%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임.
 - KCB 샘플 데이터를 통해 소득 분위별 카드사용 추이를 살펴보면, 6월 기준 저소득층의 카드사용은 1월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비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남.
 - 유동성 제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의 소비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지만,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부정책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
 - 결국 향후 민간소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고소득층의 소비 회복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

개인카드 승인실적 및 신규 확진자 추이



주 :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월말기준
자료 : 여신금융협회, 질병관리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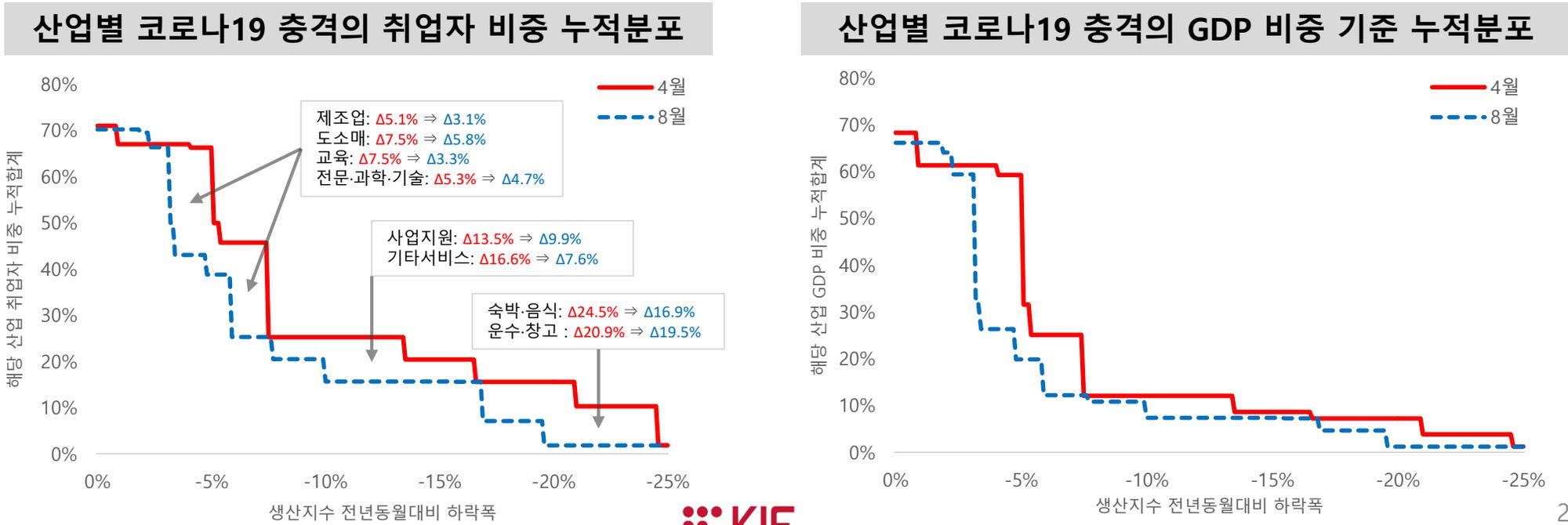
소득분위별 소비추이



주 : 소득분위별 1월 소비 대비 당월 소비 비율을 나타냄.
자료 : KCB

마. 코로나19 충격의 산업별 분석 (1/2)

- ◆ 4월 이후 경기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충격의 여파는 여전히 상당 규모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, GDP보다는 고용 측면에서의 충격이 더 심각하였음.
 - 4월 생산지수가 전년대비 3% 이상 하락한 산업들의 총 비중은 취업자 기준으로는 67%, GDP 기준으로는 61%를 차지하였으며, 해당 비중 합계는 최근 8월까지도 각각 66% 및 59%의 높은 수준을 지속
 - 다만, 일부 경기개선에 따라 충격 규모가 큰 영역의 누적분포는 전반적으로 하향이동한 것으로 확인됨.
 - ✓ 5% 이상 하락한 산업들의 비중 합계: 취업자 기준(4월 66%⇒8월 39%), GDP 기준(4월 59%⇒8월 20%)
 - ✓ 10% 이상 하락한 산업들의 비중 합계: 취업자 기준(4월 25%⇒8월 16%), GDP 기준(4월 12%⇒8월 7%)
 - ✓ 20% 이상 하락한 산업들의 비중 합계: 취업자 기준(4월 16%⇒8월 2%), GDP 기준(4월 7%⇒8월 1%)
 - 생산지수 하락폭이 컸던 산업들은 GDP 비중보다는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들로 확인됨.



자료: 통계청, 한국금융연구원
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, 한국금융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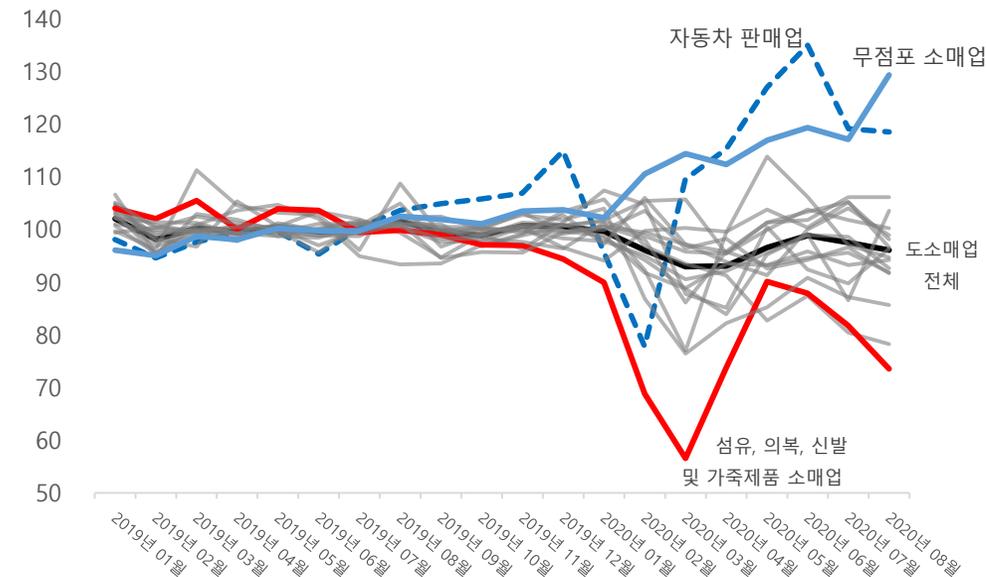
마. 코로나19 충격의 산업별 분석 (2/2)

◆ 코로나19 충격이 세부산업별로 크게 차별화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수의 평균값만으로는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.

- 예를 들어, 도소매업에 속하는 세부산업 중에는 자동차 판매업이나 무점포 소매업처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부문도 있지만 섬유, 의복,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처럼 극심한 피해가 지속되는 부문도 존재
- 제조업에 속하는 세부산업 중에도 전자제품이나 의약품처럼 역대 최고 수준의 생산지수를 기록하는 부문도 존재하지만, 가죽·의복·섬유·금속 등 부문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.

도소매업 세부부문별 계절조정 생산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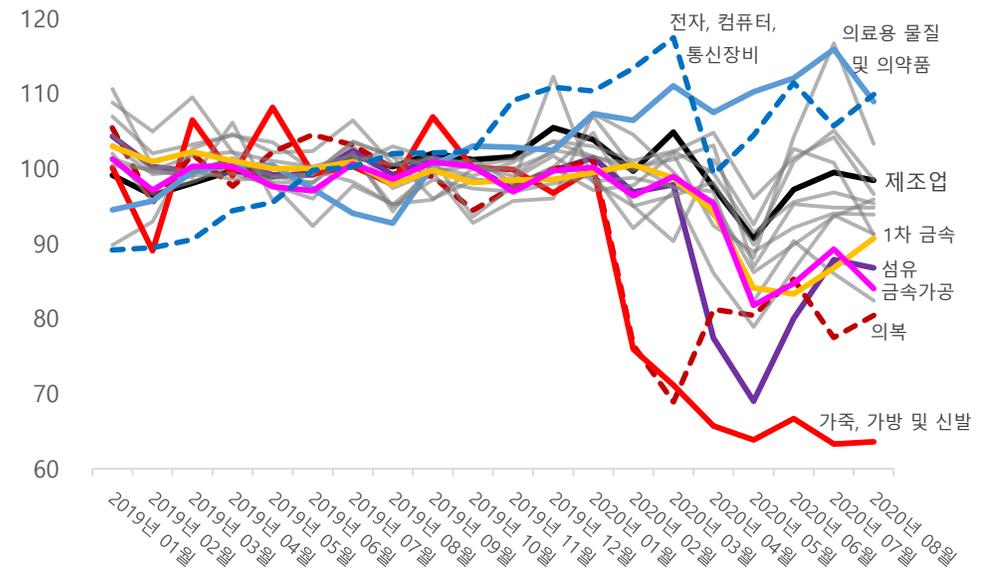
(단위: 2019=100)



자료: 통계청

제조업 세부부문별 계절조정 생산지수

(단위: 2019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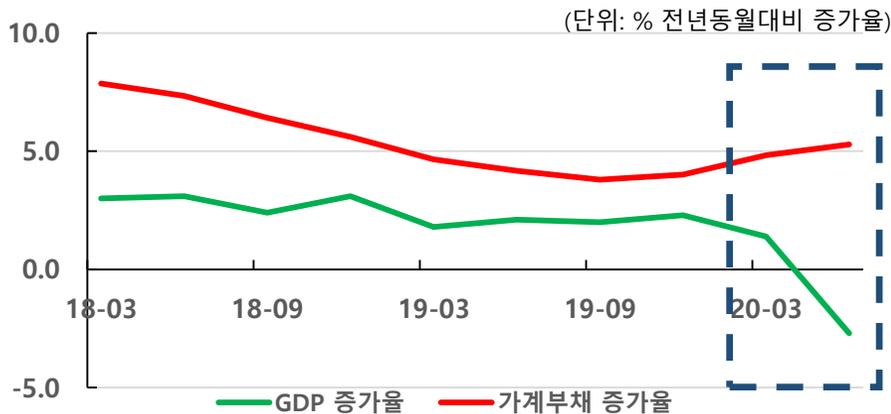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

바. 민간부채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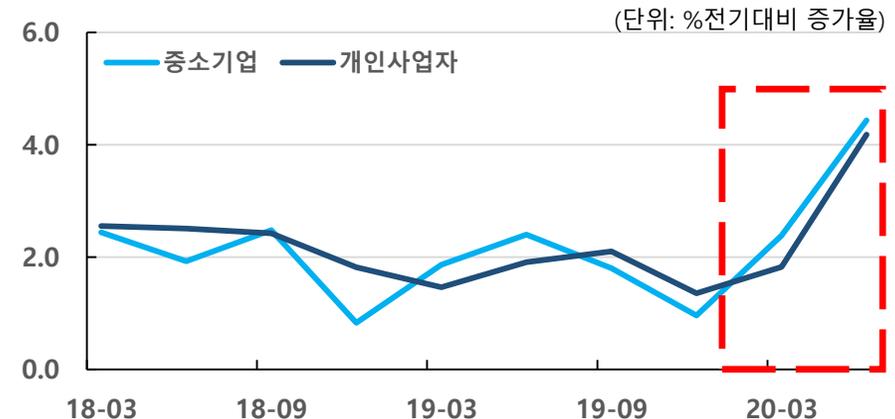
- ◆ **가계부채는 2020년 상반기 5.1% 증가하여 2019년 상반기 4.4%보다 오름세가 가팔라진데다 실물경제 실적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빨라진 점에 유의할 필요**
 -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**코로나19 확산**에 따른 생활 및 사업자금, 저금리에 따른 **주택/주식 시장 투자**의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평가
 -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소득 정체,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확대를 경계할 필요
- ◆ **기업부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면업종 중심으로 중소기업·자영업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**
 - 부채 확대는 유동성 확충으로 기업의 단기적인 대응력을 높여주지만,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부문의 업황부진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

가계대출 및 GDP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



주 : 일반은행, 원화대출금 기준
자료: 금융감독원

목 차

I . 2021년 경제전망

1. 경제전망
2. 위험요인 점검
- 3.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**

가. 종합판단 (1/3)

- ◆ 세계경제는 2020년 $\Delta 4.4\%$ 의 경기후퇴를 기록한 후 2021년 5.2% 성장할 것으로 IMF는 전망
 -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19년 대비 2021년 글로벌 GDP 전망치는 0.6% 증가한 수준에 그침.
 -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,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$\Delta 0.1\%$ 의 역 성장을 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
 - 선진국 성장률은 2020년 $\Delta 5.8\%$ 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3.9%로 반등하여 2019년 GDP보다 2%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
 - 신흥국 성장률은 2020년 $\Delta 3.3\%$ 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6.0%로 반등하여 2019년 수준을 상회하지만 이는 주로 중국의 빠른 성장(2020년 1.9%, 2021년 8.2%) 때문임.
 -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성장률은 감염병 대응능력 부족, 관광 및 해외근로자 송금 위축, 저유가 등으로 2020년 $\Delta 5.7\%$, 2021년 5.0%를 기록하여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

가. 종합판단 (2/3)

◆ 우리 경제는 2020년 $\Delta 1.2\%$ 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후, 2021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 연간 2.9% 성장할 전망

- 올해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통제되고 연말/연초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21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전망치임.
-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09년 0.8%를 기록한 후 2010년 6.8%의 빠른 반등을 보인 것에 비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음.
- 위기 이전수준으로의 회복 기간을 보면 상대적으로 짧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(4분기)보다는 1979년 2차 오일 쇼크(8분기), 1997년 외환위기(7분기)와 유사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-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2021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(2021년 상반기 2.1%, 하반기 3.8%)
-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수출·제조업보다 소비·서비스업의 회복이 느릴 전망
- 다만, 백신 승인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전제하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 개선세가 2021년 상반기부터 빨라져서 2021년 경제성장률이 3.5%까지 높아질 수 있음.
- 반면,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지연되는 만큼 2021년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아질 하방위험이 있음.

가. 종합판단 (3/3)

◆ 2021년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부진 장기화, 불균등 심화,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 전망

- ① (경기부진 장기화) 백신·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이 시작되더라도 광범위한 보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빠른 경기회복이 제약을 받을 전망
 - 마스크 착용, 사회적 거리두기, 검사 및 추적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비대면 근무방식 활용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2020년 2/4분기의 글로벌 경기 급락에서 반등하였지만 추가 회복은 완만할 전망
- ② (불균등 심화) 숙박, 여행, 레저 등 대면 위주의 경제활동은 코로나19 종식 이전 수준 회복에 한계가 있어서 코로나19 유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문별, 지역별, 계층별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
 - 취약부문의 폐업,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별로 업황 및 고용·임금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
 - 초저금리하에서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확대되고 가계부문의 부(wealth)의 양극화도 확대될 전망
 - 신흥국 및 저개발국의 의료체계 미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별 불균형도 심화
- ③ (높은 불확실성)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정도,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미국 대선 이후의 정국 향방, 미중갈등,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안요인도 중첩되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 - 낮은 금리 수준과 자산버블, 정부부채 급증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대응여력이 약화된 점도 위험요인
 - 높은 불확실성은 예비적 동기의 가계 저축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 속도를 제약

나. 정책적 시사점 (1/3)

◆ 코로나19 충격의 장기화, 불균등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필요

- 2021년 중 백신의 개발 및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대한 일정보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**“감염병과의 동행(With Corona)”**을 전제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
-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부문은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은 반면 일부는 피해가 가중되는 등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**“K자형 경제회복”**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
- 감염병 발생 초기의 지원정책이 포괄적 지원대상에 대해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향후 대책은 피해부문에 집중된 선별적 대상에 대해 **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변화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**
 - ✓ 정부의 지원대상의 피해정도를 산정할 기초자료가 되는 기업, 자영업자, 가계의 소득, 매출, 재산상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할 필요
-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**출구전략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실행**
 - ✓ 다만,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재편 혹은 폐업은 인적·물적 자원이 **과잉부문에서 성장유망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되도록 적극 지원**하고, 그 과정에서 소득지원, 재교육, 일자리알선 등을 통해 **“사람에 대한 보호”**를 강화
 - ✓ 금융회사는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기업에 대한 **엄정한 신용평가**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

나. 정책적 시사점 (2/3)

- ◆ **거시안정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시스템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**
 - **통화정책**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부진이 확실하게 완화될 때까지 **현수준의 금리를 유지**하고 필요할 경우 **통화완화 정도를 확대할 추가 정책수단을 강구**
 - ✓ 채권시장 안정과 경기 지원을 위한 **국고채 단순매입 활용 확대 방안 검토**
 - ✓ 2020년 도입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운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유동성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**질적완화(qualitative easing) 수단을 정부와 협력하여 강구**
 -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**거시건전성 정책**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, 정부가 **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민간의 부담을 경감**할 필요
 -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**단기적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**하지만, **증장기적으로 정부의 신인도가 훼손**되지 않도록 **조세확충,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방안을 강구**할 필요
 - **외환정책**은 글로벌 초저금리,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여건하에서 환율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,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미연준과의 중앙은행통화스왑 연장 추진

나. 정책적 시사점 (3/3)

- ◆ **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구조개혁 노력 지속**
 - 코로나19 유행은 재택근무, 원격수업 등을 통해 **디지털화**를 촉진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**기후변화 대응**에 나서도록 하는 등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**어차피 겪어야 할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계기**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.
 - 이런 맥락에서 **정부의 디지털·그린 뉴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**하는 것과 함께, 기존 산업의 사업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**신산업 분야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인**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을 지원
 - 이와 함께 **중소기업이 정부, 대학, 대기업, 산단, 금융회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R&D, 재교육·훈련의 질적인 향상을 이룸**으로써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지원하여 **혁신의 확산을 도모**
 - 저출산, 고령화, 디지털 전환, 감염병 유행 등으로 **달라진 여건**하에서 노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**노동 및 복지 제도를 업그레이드**함으로써 **전환과정의 고통을 최소화**하고 경제활동참여율과 노동생산성을 제고